

단순한 공사도 전국 발주 반발

평창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 전국 공고도 건설업계 불만 표출
수련원 “최근 공사 12건 중 7건 지역제한 발주해 충분히 우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지난달 2억 3,500만원 규모의 노후시설 방수공사를 공고했다. 공고 종목은 미장·방수·조적이며 전국의 모든 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에 7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지역으로 제한

해 지역 업체들을 우대할 수 있는데도 전국으로 발주해 공사수주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공사는 특허나 신기술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시공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재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명확한 지침이나 관련 내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국일반경쟁입찰로 발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도내에도 우수한

관련 건설사가 많기 때문에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련원 측은 적법하게 공고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1년간 총 12건의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3분의 2에 가까운 7건을 지역제한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업체를 우대했다는 입장이다.

수련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설공사는 지역업체 우대를 위해 지역제한을 발주하고 있는 반면 일부 공사는 내부검토를 통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공고됐다”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업체를 홀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동해고속도 속초~삼척 개통 연기

7공구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사 포기 당초보다 3개월 지연 12월 완공 예정

동해안 남북을 관통하는 동해고속도로 속초~삼척 구간이 일부 구간의 공사 지연으로 당초 일정보다 3개월여 연장된 오는 12월 전면 개통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삼척속초건설사업단은 "동해고속도로 속초~삼척 개설공사 중 '속초 조양동 주부터널 출구-노학동 콩꽃마을'(7공구 4.38km) 구간 공동시

공사인 S건설사가 법정관리로 들어가면서 공사를 포기, 준공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업단은 시공사 중 남은 H건설사가 7공구의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 현재 공정률이 80%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오는 12월중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6공구인 '양양 강현면 강선리-속초 조양동 주부터널 출구'(3.7km) 구간 공사는 일정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동해고속도로 속초~삼척 구간의 경우 연말에나 도로 포장 공사와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를 마치고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삼척 구간이 개통되면 속초부터 삼척까지 122.7km 구간이 고속도로로

연결돼 이동시간이 당초 2시간 7분에서 1시간 14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돼 물류이동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개통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12월 중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동해고속도로 속초~삼척 전 구간의 차량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IC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 추석시기에 맞춰 개통될 전망이다.

속초/박주석 jooseok@kado.net

도시기지 현대화 등을 올 4500억 규모 8건 선보인다

국방부가 최저가격찰제를 대신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세부 심사기준을 확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913-1-H 기밀공사 등 총 4500여억원 규모인 8건의 공사가 중심제로 발주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조달청의 중심제 세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마련한 '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최근 공포, 이달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올 중심제 적용 예상 물량

대대급 부대 조성 기밀사업
△913-1-H(350억원)
△913-1-C(500억원)
△913-1-F(515억원)
△913-1-E(1150억원)
기타공사
△131사업(593)
△H UAV 수용시설(507억원)
△수도기계화사단 부대개편 사업(391억원)
△도시기지 현대화 시설사업(709억원)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일반·고난이도 공사 모두 공사수행능력(전문성·역량 50점), 사회적책임(가점 1점), 입찰금액(50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일반공사 수행능력 심사 기준은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배치기술자 10점 △시공평가 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종 수급제 구성 2점으로 짜였다.

가점 항목인 사회적책임 부문은 △건설인력 고용 0.2점 △건설 안전 0.2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등이다. 50점 만점의 입찰금액 심사는 가격 산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되 단가와 하도급 계획에서 가격 산출의 적정성을 고려해 각각 4점과 2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점 항목인 계약신뢰도에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용 위반 △시공계획 위반 등이 반영됐다.

고난이도 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은 △시공 실적 또는 시공 인력(선박)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7점 △배치기술자 11

점 △시공평가 점수 15점 △공종수급제 구성 2점으로 평가를 받는다.

50점 만점의 입찰금액 평가에서는 하도급계획과 시공계획 심사에서 각각 2점씩을 감점할 수 있도록 하되, 물량심사에서 2점, 가점 1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점 항목인 사회적책임 부문과 감점 항목인 계약신뢰도 항목은 일반공사 평가 기준과 같다.

낙찰자 선정은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로 하되, 최고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가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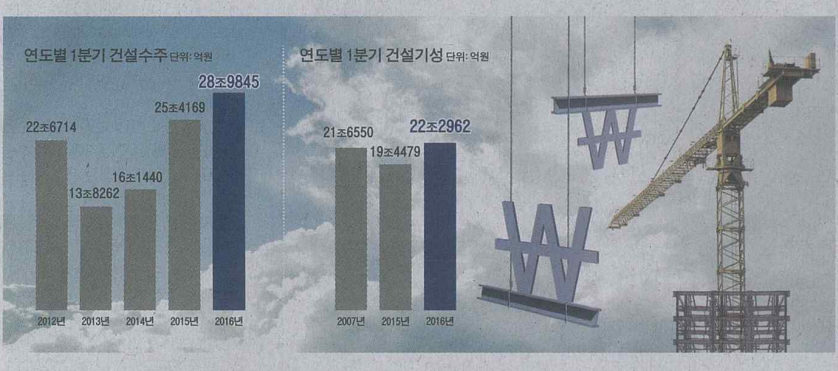
이때도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할 때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중심제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종수급제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적은 자 △추천의 순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훈령은 오는 7월1일을 기준으로 3년이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는 중심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8건 정도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중심제가 적용될 예상 물량은 대대급 부대를 조성하는 기밀사업인 △913-1-H(350억원) △913-1-C(500억원) △913-1-F(515억원) △913-1-E(1150억원) 등과 기타공사인 △131사업(593) △H UAV 수용시설(507억원) △수도기계화사단 부대개편 사업(391억원) △도시기지 현대화 시설사업(709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한형용기자 je8day@





올 1분기 건설수주·기성 '역대최대'

<29兆>

<22.3兆>

건축·토목부문 동반 호조 하반기 투자절벽 우려도

올 1분기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이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SOC(사회기반시설) 재정투자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재정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수주(경상)는 28조9845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4169억원)보다 14.0% 증가했다.

1분기 기준 건설수주는 지난 2012년 22조6714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3년 13조82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0% 감소하고서 2014년 16조1440억원으로 1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 건축부문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토목부문도 지긋지긋한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4%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건설수주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올라선 것은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이 호조를 보인 결과다.

건축부문 수주는 21조8913억원으로 전년 동기(19조4284억원)보다 12.7% 늘어났고 토목부문도 전년 동기(5조9884억원) 대비 18.4% 늘어난 7조9322억원을 기록하며 건설수주 확대에 힘을 보탰다.

발주자별로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7조9586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938억원)에 비해 73.2% 증가하며 선전한 게 큰 역할을 했다.

반면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20조5374억원)보다 1.1% 감소한 20조3182억원에 머물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도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 1분기 건설기성(불변)은 22조2962억원으로 전년 동기(19조4479억원) 대비 14.6% 증가하며 종전 최대치인 2007년 1분기 21조6550억원을 갈아치웠다.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이 폐조의 스타트를 뚫었지만 문제는 하반기 이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탄력적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 보란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275조2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상황 조정했다.

상반기에 앞당겨 쓰는 재정이 늘어날수록 하반기 SOC 재정투자절벽이 다가오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올해 건설투자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필요할 경우 추경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기 전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건설수주의 흐름이 올해 초까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하반기 들어 물량 축소는 물론 박한 공사비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하도급 금품수수·부실시공·오염물질 배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경찰, 3개월간 관계기관 공조로 전방위 수사

경찰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비정상적 관행을 특별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 △폐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 파괴 △사이비 기자의 갈취 행위 등 5가지다.

경찰은 건축·건설·토목 분야가 공정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돼 있어 각 단계에서 비자금 조성, 공무원-건설업자 유착, 뇌물-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뇌물을 만들려고 자재 빼돌리거나 저급 자재 납품,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이 난무해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노동조합 등 특정 집단이 구성원의 우선 채용이나 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시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고공농성을 벌이는 행위, 노조 집행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단속한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오물 투기나 불법 건축 등에 대한 고발 기사를 쓰겠다며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버 언론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국 경찰관서에 1316명으로 부정 부패 수사 전담팀을 꾸려 이번 단속을 맡길 계획이다. 각 시·군·구 자치단체 담당 부서와 경찰의 합동 단속반도 갖췄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서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띄워 적극적으로 제보도 수집한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로 공사 단가가 오르는 등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실공사로 국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전방위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